

현장에서 바라본 경제위기와 그 해법은? <III>

△ 사 회 : 오동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 표 : 정태인(경제평론가)

- 일 시 : 2008년 11월 17일(월) 오후 5시
- 장 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 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미국 금융위기와 한미 FTA, 그리고 대안

정태인(경제평론가)

1. 미국 금융위기의 성격

1) 금융세계화와 증권화

루비니교수(뉴욕대)나 스티글리츠교수(컬럼비아대)처럼 냉철한 이들이 이미 2년 전부터 경고해 왔던 그 사건이 드디어 터졌다. 2006년말 이후 모기지 회사, 투자회사, 증권회사가 줄줄이 파산설에 시달리거나 인수합병되고 급기야 금년 3월 베어스텝스에 2000억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이 이뤄졌을 때까지도 대부분의 증권가 사람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제 코너를 돌았다"고, 즉 안심해도 된다고 진단했다.

이제서야 만발하는 온갖 원인 진단과 처방에 한 줄 더 보탬 생각은 없다. 시장만능의 신앙을 탓하기에도 너무 지쳤다. 다만 급할수록 돌아라가라는 오래 묵은 지혜에 따라 한 걸음 물러서서 과거와 미래를 멀리, 또 넓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정권을 잡은 이래 시장만능의 정책기조가 자리를 잡았고 미국에서부터 금융규제가 풀려 금융 세계화가 각국의 규제를 무너뜨리고 자산 증권화(유동화)의 기법은 나날이 교묘해졌다.

실리콘밸리의 신화와 스톡옵션의 비밀이 보통사람에게도 로또의 꿈을 심어준 것은 90년대였다. IT 열풍은 거품을 부풀렸고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이 거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마술사 그린스펀(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재빨리 움직였다. 월스트리트의 연금술사들로 하여금 땅으로도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깨우쳤고 사상 최저의 이자율로 그들을 응원했다. 부동산 거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듯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이 거품을 만들고 또 터지는 경험은 미국에서도 80년대 말 S&L 사건으로 이미 겪었다. 그 때도 5년 넘도록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한 끝에 정리된 바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학 교과서들은 3중의 도덕적 해이의 대표 사례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때와 확연히 다르다. 86년부터 89년경까지 지속된 S&L 사건을 기억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88올림픽 즈음이라서 뭔가 일어 터졌다면 '호사다마' 식으로라도 기억에 남았을텐데 말이다. 그런데 20년 후인 지금은

어째서 달리는 물론 주식 한 장 없는 사람조차도 저녁이면 코스피와 환율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게 되었을까?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금년 초 미국의 부동산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올 때 영국의 노던록 은행이 파산한다든가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1989년과 2008년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바로 금융세계화와 그 기법인 증권화에 해답이 있다. 90년대와 2000년대는 가치 금융의 천국이었고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은 이 시기의 총아였다¹⁾.

모기지 회사가 장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행한 위험한 MBS를 인수한 투자은행은 여러 채권을 섞은 CDO를 합성했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회피하기 위한 CDS도 섞어서 복합 CDO로 합친 뒤 다시 쪼개 전 세계에 풀었다. 범위는 한 없이 넓어졌고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연금술사들조차도 자신들이 어떤 시료를 넣었는지 알 도리가 없게 되었다. 스티글리츠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그리고 루비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체제의 위기", 즉 금융시스템 자체의 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²⁾

2) 자본에 의한 물질생활의 포섭

저 위의 이런 사태가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90년대 초반까지도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일이었지 일반인의 삶, 브로텔의 "물질생활"까지 스며든 것은 아니었다. 물론 주식에 주기적으로 열광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새삼스러운 일이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부동산이 파생상품과 연결된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특징이다. 이제 자본은 노동과정에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포섭하고, 뒤이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실질적 포섭을 넘어 생활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물질생활'을 포섭하게 된 것이다.³⁾

1) 1999년 그램-리치-브릴리법의 도입은 은행, 증권,보험의 경계를 허물어 상업은행도 투자은행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다섯배 이상 증가했다.

2) 정성진, 강남훈교수 등은 현재의 위기를 파생상품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TRPF)'에 따른 '과잉자본 위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TRPF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력처럼 작용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며 상쇄경향도 또한 존재한다.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여 현재의 사태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90년대의 IT붐이 과잉자본을 형성시켜 이윤율이 저하했고(90년대말의 위기), 이를 상쇄하기 위해 그린스핀의 이자율 인하를 시발로 전 세계가 금융버블을 형성시켰다. 이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규제완화가 잇따랐고 그것이 결국 시스템 위기로 전화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다만 맨 밑에 TRPF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자본의 실제 장벽은 자본 자체(마르크스)이므로 자본주의의 폐지만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진실'이 강조될 뿐이다. 하나 덧붙인다면 현재의 금융위기를 비판하는 이들이 케인즈주의를 또 다른 '마술사'로 여기는 풍조에 대한 경계로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상을 변혁하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3) 로버트 라이쉬의 '슈퍼 자본주의(로버트 라이쉬, 형선호역(2008), 슈퍼자본주의, 김영사)는 시민들이 투자자로서, 소비자로서 자본에 포섭되어 민주주의를 잃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90년대에 이르러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거대 신흥국가들의 제조업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신조대로 임금을 억제하고 복지를 삭감하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든다. 과소소비의 위기를 해결한 것이 바로 중국이었다. 값싼 제조업 상품의 물결은 낮은 실질임금을 보충하고도 남았고 여기서 생긴 세계적 잉여를 연금술사들은 노렸다. 보통 사람의 물질 생활에 연금술이 만들어낸 각종 증권이 끼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과생상품은 삶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나아가서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상의 물질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에 낀 거품은 일반인이 일상적 소득을 아무리 저축해 봐야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서비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 홀로 이 게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 타짜와, 이들을 고용한 부자들, 또는 기관투자자가 이기는 뻔한 게임을, 오로지 대박의 희망에 목숨을 걸고 치를 수밖에 없다.

보통사람의 삶까지 포획한 이 게임은 금융의 위험을 끝없이 분산시켜야만 유지되는 것이다. 폭탄을 키우면서도 끝없이 쪼개서 돌려야 하는 게임이었고 폭탄 버블이 꺼지는 순간 잘게 쪼개진 폭탄은 금융기관이라는 화약고에 들어 있던 안전한 기름까지도 타오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위험의 불투명한 분산은 기실 위험의 은폐였고 불신이 팽배해진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다.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구제금융의 물줄기라 해도 과연 이 폭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가족의 삶,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도 전 세계적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2. 흔들리는 팩스 아메리카나

1) 쌍둥이 적자 해결책의 유지가능성

그 동안 미국경제를 유지해 왔던 국제질서도 의심스러워졌다. 이 역시 80년대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여 30년간 농익은 문제이다.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그리고 아들 부시는 차례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군비 강화를 피하다 그에 이슬람권을 상대로 전쟁까지 벌였다. 80년대 말 소련이 무너진 후, 경제력의 현저한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퍼 파워로 존재했다.

전비 조달을 위해 달러 강세를 유지해야 했고 미국인의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 재정 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부풀어 올랐다. 중국 등 아시아는 미국의 소비도 살렸지만 동시에 그 무역흑자로 미국 재무성 증권을 사들임으로써 미국의 재정적자 또한 메워주고 있다. 달러 헤게모니가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날이 확대되는 거대 불균형마저 간단하게 해결하는 미국의 힘을 믿고 세계의 돈이 모여들었고 연금술사들이 만든 각종 금융상품은 세계를 누빌 수 있었다. 일반인의 물질생활 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들은 마법에 끌려들어갔다.⁴⁾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 뿐 아니라 미국경제 그 자체가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불신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미국 의회마저도 의심하는 7천억 달러 짜리 소화기를 믿고 세계의 돈은 앞으로도 미국으로 몰려 들 것인가? 미국의 연금술에 대한 믿음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2) 공격적 무역정책이라는 단기 해결방식

80년대에는 미국 상품의 수입을 강요하거나(공격적 무역정책) 상대국들의 통화를 절상하는 동시에 이자율을 내리도록 하는 '반강제적 국제협조'로 이 난제를 미봉했다. 80년대 중반 미일반도체 협정, 그리고 플라자협정이 대표적인 조치였고⁵⁾ 일본의 장기침체의 뿌리는 역사의 이 지층까지 닿아 있다. 과연 이 방법은 이번에도 통할 것인가?⁶⁾

한편 미국 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미약한 규제만 받던 투자은행을 상업은행과 묶어 조금 더 강한 FRB의 규제를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 자체에 손을 대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보통사람들의 물질생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체제에 파고든 이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의 위기는 기어코 상업은행마저 집어 삼키지 않는 것일까?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마저 문제가 된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의 삶은 맨 밑바닥까지 흔들리게 된다. 또한 중국은 과연 80년대의 일본처럼 행동할 것인가? 중국의 동부는 이미 부동산 거품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보다도 이 이자율을 낮춰서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4)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아예 연금술의 도제가 되고자 한미 FTA를 맺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려 한다. 뒤에서 보듯이 한국 지배계급의 이 목표는 미국이라는 '이상적 모델'의 위기에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5) 플라자협정의 핵심은 달러 헤게모니를 인정하기 위해 미국의 달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를 설정해 각국이 내수를 확장하는 것이다. 한편 미일반도체협정의 핵심은 일본 반도체 시장의 20%를 미국 반도체로 채우라는, 어이없는 '강요'였다. 이런 종류의 강요는 지금도 현실인데 예컨대 한미 FTA의 남아 있는 자동차 쟁점이란 사실상 미일반도체협정과 같은 종류의 요구(한국시장의 10%를 미국 자동차로 채워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6) 이 정책을 사용한 것은 레이건 정부였지만 그 이론적 기초는 크루그만 등 뉴 케인지언 계열이 세웠다. 따라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포스트 브레튼우즈 대응책 등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단기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3. 신자유주의의 종언?

1) 포스트 브레튼우즈?

스티글리츠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선언했고, 그 누구보다 이 사태를 정밀하게 예견한 루비니는 지금은 서브프라임 사건이 아닌 ‘서브프라임 체제의 위기’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주범 중 한명인 그린스펀마저도 40년 동안 맞아온 자신의 이론이 '100년만의 위기'로 심각한 결함을 노정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우선 시스템은 붕괴했다.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리라는 시장만능을 몸에 새겨 놓은 폴슨 미 재무부장관이 투자은행의 팔을 비틀어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를 관철시키는 데까지 몰린 것이야말로 그 상징이다. 몇 십년간 경제학자들을 사로잡아 온 시장만능의 세계에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번에 인정한 건 도대체 어찌 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일 뿐일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연금술사들은 형편없이 싸진 유수의 투자은행들을 인수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왜 가장 효율적이라는 시장이 긴급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보고 거리를 건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완전 경쟁과 완전정보의 세계라면 사거리의 신호등부터 없애야 할 것이 아닌가? 전쟁이 일어날 때 왜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러나 반성은 여기까지다. 자유의 천국에 이미 도달한 금융시장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간명한 토빈세마저 정말 온 나라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10년 전 클린턴 대통령이 '50년만의 위기'라고 이름지었던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때도 그랬듯 국제규제기구의 창설은 말만 무성하다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닐까?

더 근본적으로 브라운 영국총리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는 과연 가능할까?7) 현재의 기괴한8) 달러 본위체제를 바로 잡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아이젠그린이 강조한 세계 단일 통화체제가 불가능하다면기껏해야 아메리카-유로-아시아의 복합 통화 바스켓 체제일텐데 그마저 과연 가능할까?

7)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타고난 코미디언인데, 사르코지와 만나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에 동조한 것도 그 하나의 예이다. 물론 '국제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던 주장을 바로 '국제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로 바꾸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진정한 코미디가 성립하는 법이다.

8)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달러헤게모니는 사실 대마불사의 도덕적 헤이에 의존하고 있다.

2) 패권국가의 교체?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거나 기술적인 차원 이상을 사고해야 한다. 바로 패권(hegemony)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이론적 합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⁹⁾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그 합의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그 다음의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브로델이나 아리기, 또 왈라스타인처럼 장기 역사를 눈에 담고 있는 학자라면 '기나긴 16세기'의 네델란드를 대체한 영국이나,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야 영국을 대체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있음을 볼 것이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패권 이행의 마지막 단계인 "금융팽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사례에 비춰 볼 때 과연 미국을 대체할 헤게모니국가, 또는 국가군은 준비돼 있는 것일까? 1920년대에 미국은 이미 생산력 수준에서 영국을 능가했지만¹⁰⁾ 실제로 패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과시즘의 출현과 뒤이은 세계대전을 거쳐야 했다. 아마도 차기 패권국가의 대표적 후보일 중국은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화평굴기를 내세웠던 후진타오 스스로 도광양회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반대로 스스로 패권을 놓을리 없는 미국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미국 외교정책의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할 때 중국 포위 전략과 현재의 위기를, 대통령 오바마라고 어떻게 짜맞출까?

오히려 더 분명해 보이는 건 단기적인 미국의 해법이다. 80년대 중반에 그랬듯 다자간의 플라자협정, 또 양자간의 미일반도체 협정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의 일본과 같은 만만한 대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이 두 사건을 계기로 광란의 부동산 투기붐과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는 사실을 다 아는 중국이 과연 그런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역사가 보여 주듯 오랜 혼돈의 시기가 이어질 것이다. 10년 내지 20년을 크고 작은 무역전쟁(환율전쟁, 이자율 전쟁)으로 메운 뒤에야, 심지어 전쟁을 겪고 나서야 가닥이 잡힐지도 모른다.¹¹⁾

9)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라는 바그와티, 프리드만, 피셔, 삭스, 크루그만, 스티글리츠 사이의 백가쟁명을 돌아보면 최소한의 이론적 합의조차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10) 20년대 미국의 대표적 상품인 포드의 T-car나 루즈벨트의 '노변정답'을 가능하게 했던 라디오가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11) 뒤에 쓰겠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동아시아국가들, 특히 중국의 무역흑자로 메우고 있는 것을 안보의 문제라고 인식할 정도로 경계하고 있다.

첫째,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는 소득재분배를 해법으로 내세웠고 루즈벨트는 위기와 전쟁에 힘입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의 양보를 끌어냈지만 지금은 예컨대 '자산재분배'의 이론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계급간 역관계의 재편을 끌어낼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 아니 월스트리트가 아직 덜 망해서 자신의 패권을 스스로 넘겨 줄 수 없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월스트리트가 약간의 수정을 가한 '신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패권 이양만이 살 길”이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셋째 국제 권력 다툼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4. 이명박 정부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미래

1) 유동성공급과 부동산 붐을 위한 전방위 조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던 이명박 정부는 10월 들어 이른바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숨 가쁘게 들어냈다¹²⁾. 도대체 무

12) 정부의 위기 대책을 요약하면 달러/원화 공급으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동시에 부동산 경기를 일으킬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세제 및 소득세제를 개편해서 일반 국민들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또 한번 거대한 거품을 일으켜서 위기를 넘어 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 발상이다.

10월 19일 종합대책은 달러 공급대책으로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300억 달러 공급, 그리고 원화 공급대책으로 환매조건부채권과 국채의 한은 매입이 포함돼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으로 1조원 상당의 기업은행 현물출자도 담겨 있다.

10월 27일에는 한은이 0.75%p의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했다. 10월 한달 동안 1%p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10월 29일 현재 정부가 내년까지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원화 금액은 모두 4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포함한 달러지원 규모도 151조원이다. 합계 195조원은 올해 정부 예산 220조원의 89%에 이른다.

10월 21일에는 건설업 지원을 위주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9조원 상당의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 건설사 소유 토지 매입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부동산경기 붐을 위해서 10월말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 투기억제책으로 도입된 모든 정책을 폐기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9차례의 대책을 내 놓았는데 6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8월21일 재건축 규제 완화, 9월 1일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 9월 19일 보금자리주택보급, 그린벨트 해제가 이미 포함됐다.

그리고 11월 3일의 종합대책은 수도권 환경규제의 완화까지 포함하는 등 부동산 붐을 향한 모든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11월 3일 드디어 종합판이 완성됐다. '난국 극복' 비용은 무려 33조원으로 GDP의 3.7%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감세를 19조원이나 했는데, 동시에 재정지출 또한 대규모로 늘리니 이제 정부의 빚, 즉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1-2년 내에 드러나겠지만 그 결과는 이자율 상승(채권으로 재정적자를 메울 경우) 또는 인플레이션(돈을 찍어서 재정적자를 메울 경우)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지출의 내용이다. 5조 6천억원을 SOC 투자, 즉 건설에 쏟아 붓겠다. 민간 쪽에서는 이미 아파트 건설족의 지원으로 공급 쪽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투기적 수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정부는 강

엇이 '선제적'이라는 것일까? 정확히 말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전통적 정책들은 모두 미국과 유럽의 조치에 질질 끌려간 것이다. 다른 나라가 모두 경쟁적으로 이자율을 내리고 은행 간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하니 그제서야 따라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선진국들의 '지푸라기 잡기'를 믿고 흉내 냈을 뿐이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봤다면 그 때마다 호언장담만은 삼갔어야 했다. 일반 투자자인 국민들이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을 이슥의 양치기소년으로 저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이참에 실천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촛불에 밀려 주춤했던 경기부양 정책이 '충분히' 쏟아지고 있다. 7% 성장을 위해 기획됐던 금리인하, 감세, 규제완화까지 그 다양한 성장 정책의 화살촉은 일제히 부동산 붐을 겨냥하고 있다.

문제는 9조원 이상 쏟아 부어 부동산 공급을 살리면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바야흐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데 있다. 답은 투기를 일으켜 수요곡선을 신속하게 오른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위해 두 달 만에 재정부가 180도 말을 뒤집는 코미디는 물론¹³⁾, 양도세도 인하하고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머릿 속은 이렇다. "우리의 토종 투자은행을 키워야 한다는 5년 넘은 목표도 이번 기회에 조기 달성해야 하니 자본시장통합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금산분리의 경계선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 미국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금융이 구멍가게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다음 번 위기에 이 나라를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할 재벌계 은행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들의 사고는 거침없이 나아간다. "감세정책이 가져올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네트워크 공기업을 팔고 민간보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면 주식 붐 또한 일어날 것이니 환상의 쌍둥이 투기경제도 가능하다" 이대통령이 불을 끄기 위해 들이 부었다는 것은 물이 아니라 '기름'이다. 인내하며 잡았어야 할 울타리 밖의 불을, 내부의 장기 실물위기로 옮겨 붙이기 위해 '충분한' 기름을 부어 '선제적'으로 거품

남3구만 빼곤 전국의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정부가 한국은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LTV, DTI 규제를 대폭 후퇴시킨 것이다. 또한 바로 자본이득을 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강남을 목표로 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허용하고 소형 아파트를 지을 부담도 덜어줬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투기적 목적의 돈도 유인해야 하니 전매 제한기간을 대폭 줄였다.

갈 때까지 가자는 것일까. 이전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도 손을 대고(대기의 질은 선진국보다 훨씬 나쁜데도 선진국 이상의 규제는 줄인단다), 자연보전권역 내의 입지규제도 대폭 후퇴시킬 예정이다. 이제 공약 중 남은 것은 민영화와 한반도대운하 뿐인데 때를 맞춘 듯, 일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광승준 전 기획수석은 민영화가 '개혁'의 백미이며 추부길 전 비서관은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종부세를 '식물인간'상태'로 만들었다.

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2) 오바마의 당선과 한미 FTA

미국발 금융위기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오바마 당선자의 현재까지 공약은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오바마는 상위 5%에 대한 증세를 통해 나머지 95%에게 "노동에 대한 지불"(Making Work Pay)라는 이름의 세금 환급을 약속했다.¹⁴⁾ 물론 이러한 조치가 레이건 시대 이래로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 성장을 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클린턴 집권기에도 계속됐던 대기업, 특히 금융산업의 규제완화도 이제는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바마는 소기업과 신기업(start ups)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를 약속하는 한편 "월스트리트 보다 메인스트리트"를 강조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¹⁵⁾

생태문제에 관해서도 오바마는 과거의 정부에 비해 훨씬 더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 자체를 감축시키고 에너지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것이 그렇고 나아가서 신에너지 부분이나 고효율 에너지 자동차 등을 미국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¹⁶⁾ 또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의료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AIG와 같은 대형 보험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4700만명이 아무런 보험 없이 살아간다면 그 보조금을 줄여 최소한 아동을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겠다고 했다.¹⁷⁾ 오바마는

14) 연간 25,000 달러 이하의 가구에 세금의 변화 없이 연간 천달러의 수표를 지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15) 월스트리트를 얼마나 제압할 수 있는지가, 오바마가 제2의 루즈벨트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제2의 케네디 또는 심지어 클린튼에 머무르고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과연 오바마가 현재 미국의 현금수입원인 금융산업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관찰자들은 오바마가 시카고 대학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지적 배경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머무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한편 오바마가 민주당 내 진보파인 로버트 라이시와, 월스트리트 파인 로버트 루빈을 두명의 밥(Bob, 로버트를 미국에서 줄여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양자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도 현재의 오바마 정책이 앞으로 오른쪽으로 기울 것임을 시사한다. 루빈은 앞서 이야기한 99년 웬다-리치-그릴리법 제정 때 재무장관이었고 장관을 사임한 후 시티코프 회장으로 간 바 있다.

16) 그러나 오바마의 탄소배출계획은 각 기업의 탄소배출 상한선을 정하는 동시에 배출권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cap and trade). 미국의 정치제도에 비춰 볼 때 대기업들이 더 많은 배출권을 배정받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일 것이고 결국 이 계획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17) 힐러리가 전 국민의 강제가입을 약속한 것에 비교하면 이 분야에서도 오바마는 소극적, 또는 시장적이다. 오바마는 무보험자들에게 건강 보조금을 주되 가입은 자유의사에 맡길 계획이다. 혹자는 이를 시카고 학파의 영향으로 본다.

또한 미국의 약값 인하를 위하여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뜻을 밝혔고, 교육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재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무역조정법의 대상을 서비스업에까지 확대하고 예산의 일부를 노동자들의 진업교육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정책은 분명 30년 가까이 미국을 지배했던 시장만능의 해법에 비해 훨씬 더 개혁적이다. 대외정책 역시 부시 8년간의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다자주의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대 북한 정책 역시 일단 대화로부터 출발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역사적 흐름과, 미국의 이익 간의 괴리를 과연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가 과연 고든브라운 영국 총리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 즉 달러 패권의 지양에 순순히 동의할 수 있을까?¹⁸⁾

앞에서 보았듯이 오바마의 미국 역시,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끝없는 마찰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특히 오바마의 공정무역론은 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제창된 관리무역론과 산업정책의 조합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 특히 오바마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의 무역흑자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현재의 거시 불균형 상황을 '안보의 문제'로 바라본다.²⁰⁾ 실제로 오바마는 중국의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가 위안화의 인위적 절하나 중국의 수입 규제 때문이라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²¹⁾

미국의 FTA 정책도 이런 관점의 연속선 상에 있다. 오바마는 공정무역의 기준에 비춰 카프타(CAFTA, 중미자유무역협정)에 확고하게 반대했으며 우선 나프타의 개정을 공약했다. 주지하다시피 나프타는 미국 FTA의 표본이므로 이것부터 개정해서 새로운 표준에 의해서 다른 FTA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 자동차산업, 쌀산업, 쇠고기산업에서의 불평등에 관해 언급

18) 예컨대 복합통화바스켓체제는 기술적 어려움이나 ERM의 경험을 놓고 경제학자들 사이의 지리한 공방으로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상 해법을 거부한 바 있다.

19) 이 정책은 오바마의 참모군에 거론되는 폴 크루그만이나 로라 타이슨등의 이론에 뿌리를 대고 있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관리무역과 산업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 시장을 개방시키는 정책의 근거로 종종 사용되었으며 학자들은 이를 과거의 보호주의와 비교해서 '공격적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다. 물론 이런 의미의 공정무역은 스티글리츠의 공정무역론(Fair Trade for All)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은 대통령자문회의 의장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20) 실제로 전쟁에 준하는 알력이 일어 났을 때 중국 등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 재무성 증권은 미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들 나라가 그 중 일부만 판다고 하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은 일거에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21) 공식문건에는 상대 국가가 좋은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받아 들이도록 함으로써(이 두 기준은 클린틴이 나프타의 비준 조건으로 새롭게 추가한 조항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게 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그러한 '공정/불공정'기준은 미국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로 쉽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바 있지만 현재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²²⁾ 현 시점에서 확실해 보이는 것은 한미 FTA에 관한 비준 여부는 나프타의 개정 이후로 미뤄질 것이며 한미 FTA와 관계없이 86년 미일반도체 협정과 유사하게 한국 자동차 시장의 미국 차 점유율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내 선비준을 외치고, 엉뚱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협상을 들고 나오는 것²³⁾은 코미디라고 할 수 밖에 없다.²⁴⁾ 지금 우리가 한미 FTA 협정문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오바마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입각해서 압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법과 제도를 빠른 속도로 바꿔 나갈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부시 정권 때의 미국의 법과 제도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로버트 라이쉬가 강조했듯이 미국의 법과 제도는 90년대와 2000년대의 로비에 의해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의 법과 제도는 미국의 노동자나 중소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바뀌는데 한미 FTA에는 과거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오바마가 공약대로 미국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이 약화된다면, 한미 FTA의 의약품 분야도 이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그나마 한국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선결요건 중 하나였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미 FTA는 선비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미국의 법과 제도를 고려하여 폐기의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재검토되어야 한다.²⁵⁾

22) 쇠고기 문제는 지난 봄의 위생검역협상으로 미국의 기대 이상으로 해결됐다. 또한 쌀 시장은 WTO 협정 상의 개방 일정 때문에 한미 FTA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자동차 분야의 불공정이라는 것도 50만 대 5천이라는 숫자의 문제로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가 한미 FTA에 관해서 아주 적은 정보만 가지고 있거나 FTA 전반에 관해 얕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 금융위기 등 상황변화를 이유로 재협상을 제기했다. 금융분야에서 확인된 것은 분명하다. 한미 FTA로 인해서 한국의 대외 변동성은 지금보다도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번의, 은행의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은 앞으로 한국의 은행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또한 필수적인 지식도 없이 미국의 파생상품을 팔게 되리라는 것을 증명했다. 결국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상품의 단순 판매창구로 전락할 것이며 이는 현재와 같은 사태를 어느 때고 초래할 수 있다는 예측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 또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주식시장에 들어온 외국인자본의 유출에 대해서 금융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정도의 사실만 노 전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더라도 재협상이 아니라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한미 FTA를 추진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2007.4.2) 후 언제든지 반대파와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토론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미리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24) 선비준론의 허구성은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선비준한다고 해서 미국의회가 이에 따라 단 한달이라도 빨리 비준할 것이라는 것은 미국의 통상역사를 한번도 읽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둘째 실령양국이 비준해서 한미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다. 원래의 협정으로 자동차 등의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엉터리인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 내구 소비재로 이뤄져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구입을 위기 후로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25) 물론 더 불리해질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무역구제 분야와 기술표준이나 환경규제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의 법과 제도가 바뀔 때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미국은

이번의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의 실물 대외의존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이미 지나치게 높아서 해외에서 비롯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외의존도가 높으므로 한미 FTA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경제 정책기조 전체도 고려한 한미 FTA의 재검토는 분명 현재의 정부와 국회의 능력을 훌쩍 벗어난 일이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도 힘든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3) 대안은 어디에?

일반 국민을 연금술로 더 이상 현혹해서는 안 된다. 성실한 근로만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하며 더욱이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 파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존재가치는 정보의 제공과 위험의 분산에 있다. 그러나 그 모두를 포함한 가격이 널뛰어서는 가격이 오히려 합리적 결정을 방해한다. 오로지 자본이득을 노리는 한, 아니 위기 시에 살기위해 행동하는 한 떼거리 행위(herding)는 필연적이다. 시장은 미세조정의 기구가 아니라 폭력적 조정의 괴물이 된다.

너무 복잡해서 불투명한 위험의 분산은 오히려 위험을 은폐한다. 부동산과 돈 자체, 그리고 사람이라는 사이비 상품(플라니), 정확히 말해서 상품이 되어선 안 되는 생명의 자산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문가들과 상층이 금융시장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스템의 규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은 원래의 기능, 즉 자금중개기능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²⁶⁾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득재분배와 함께 자산재분배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미국이 과도하게 누리는 현재의 경제 패권은 분산되어야 한다. 세계 정부가 요원하다면 EU와 아시아 공동체가 이 권력을 분점해서 적어도 배 짜라식 우격다짐이 더 이상 통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제경제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는 치앙마이 협정을 발전시킨 AMF 설립, 나아가서 ACU(아시아 통화)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아무런 비전도,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현 정부

국내법의 개정, 나프타 개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비로소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26) 연쇄 부실을 낳는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밖에 없다. 즉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국가(또는 시장 밖의 어떤 기구)의 개입에 의해서만 조정이 되는 시스템 위기의 성격을 띤다. 금융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금융의 공공성이 도출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이란 시장의 조정에 단순하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은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EU가 택한 '부분국유화'는 이러한 규제의 한 방법인데 '국유화와 전문경영', 그리고 세심하고 계속 변화하는 금융감독이 금융규제의 일반적 방법일 수 있다.

가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현재의 위기가 미봉해서는 안된다. 국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면 아시아에서, 그리고 우리부터 경제를 보는 시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외국자본 이탈이 무서워서 일반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을 한없이 미룬다면, 아니 실은 관료까지 합세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걸어 상층 금융자본가의 이익만 도모한다면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넘어 '자본주의의 종언'은 불가피하다.

우선 바깥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안으로부터의 성장, 밑으로부터의 성장을 꾀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경제 성과가 월등할 것이고 장차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제 1-2년 내에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은 벼랑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 주위의 구멍가게와 음식점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한국의 지배 3각동맹(재벌-경제관료-조중동)이 추구한 금융비대화의 영향으로 무려 600만에 달하게 된 영세 자영업자들이 내수의 위축에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차례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금리인하나 보증의 확대 만으로 은행의 대출이 늘어날 리 없다. 내수 영세 중소기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동시에 침체에 빠지면 수출 대기업은 예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로 대응할 것이다.

이번 위기는 97년과 달리 대기업의 도산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전화 등 한국이 자랑하는 대표적 조립 상품도 이미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모아서 박정희식 독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이 정부가 재정적자의 해결책으로 내세울 민영화('공기업 선진화'27))는 공기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의 공포에 몰아 넣을 것이다.

자영업이건 제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금속이건 공공이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우리 모두 위기에 빠진다. 앞에서 말했듯 현재의 자본주의는 노동과정만 포섭한 것이 아니고 물질생활(맑스의 노동의 재생산과정)마저 포섭했다. 나만

27) 민영화는 privatization의 번역이다. privatization은 좁은 의미에서는 국유화의 반대말로서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 국제기구에서 privatization이라는 용어는 장기위탁이나 임대, BOO나 BTL 등 운영과 건설에 시장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는 정책(PPP를 포함해서)을 총칭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좁은 의미의 privatization, 즉 사유화로 상정하고 선진화의 경우 여기에 PPP, 그리고 내부 효율화까지 더해 더욱 폭넓은 용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privatization을 사유화로 번역하면서 이 용어로 넓은 의미까지 모두 포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원래의 뜻을 살린다면 좁은 의미의 privatization을 사유화로, 그리고 넓은 의미의 그것을 민영화(또는 사영화)로 번역하는 것이 '언어의 혼란'을 막는 방편으로 보이는데, 이는 물론 사견일 뿐이다.

살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지배자들의 승리를 공고하게 만드는 게임에 우리 모두 빠져 있으니 위기가 진행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나만, 또는 우리 조직만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기존 게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동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죽이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단지 생산을 중단하는 파업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을 중개기능이라는 원래의 기능으로 한정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 곧 실질임금을 올리며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납품가를 보장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믿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의 강화, 공공의료의 확대, 네트워크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투기성 게임의 룰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를 살려내야 우리 경제도 살아난다. 안전한 먹을거리, 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의 보고인 돌봄 노동(사회적 일자리)이 모두 지역에 있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장기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런 해법은 단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소비를 늘리고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거시경제적 길이기도 하다²⁸⁾.

이번의 위기는 그러한 대안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봄과 여름에 타올랐던 촛불은 이 모든 '혁명'의 전주였을 뿐이다. 이명박정부가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하고 기초적 민주주의마저 말살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우리의 대안에 기꺼이 동의하게 만들 것이다.

28) 이런 해법은 구사민주주의의 복지(welfare), 신자유주의 시기의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대체할 생명복지(lifare)로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생태주의적 해결은 사회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